

[종합]

친노의 반격 “당 지도부가 대통령 인사권 침해”

김병준 교육부총리 인사 파문에 이어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과 관련된 당청간 갈등이 친노·비노간 여당내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이같은 여권내 갈등이 노무현 대통령 탈당 논란과 노사모 등 친노 외곽그룹의 김근태 당의장의 공격 등과 맞물리면서 정계개편의 촉발제로 작용하지 않나 하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당초 문재인 기용설에 반발하던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일단 숨을 고르는 표정이다. 김근태 의장은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청관계와 관련해 한마디의 발언도 하지 않았다. 다만 김한길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당은 공동운명체”라며 “상호존중과 신뢰에 입각해 소통한다면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성공할 것”이라는 원론적 언급만 내놨다.

그러나 밑바닥에서는 청와대를 향한 불만과 비판이 계속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인사

문재인 법무 인선 싸고 친노-비노 대리전

盧대통령, 김근태 의장에 불쾌·당혹감 느껴

코드인사 반발하던 지도부 돌연 침묵속으로

권을 침해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얘기이고 너무 구태의연하다”며 전날 이병안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전날 이병안 실장이 총대를 메고 당을 향해 날선 반격을 퍼던 청와대는 이날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친노 코드를 맞추고 있는 당내 친노그룹과 당의 광 친노조직들이 대신 나서 “지도부가 도를 넘었다”며 반격에 나섰다.

친노조직의 한 조선의원은 “대통령이 매우 불쾌하고 당혹해하고 있다. 김근태 의장에 대해 섭섭해 한다”며 “김 의장이 도를 넘어서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친노 외곽조직인 국민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지도부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감 바라 배 뇌라 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고, 노사모의 노혜경 대표는 “장관은 인기투표로 뽑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같은 갈등은 노 대통령이 문 전 수석을 내정할 뜻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가 수그러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탈당설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들은 겉으론 “지금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최근의 여권 내 미묘한 상황변

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표정이다. 물론 청와대는 4일 탈당 등 중대결단설과 관련, “노 대통령은 탈당할 생각이 없고, 탈당은 전혀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 다기한 갈등 구조 속에 7일 여를 휴가를 마치고 입무에 복귀하는 노 대통령의 ‘휴가구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상에 담긴 고민의 결과가 당장 ‘코드인사’ 논란에 휩싸인 정국의 방향타를 잡을 가능성이 큰 탓이다.

더욱이 안희정씨의 복권 여부, 한미동맹과 대북관계 정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굵직한 현안이 노 대통령의 휴가 보따리에 또 다른 ‘승부수’가 들어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 대통령이 그간 위기 때마다 정면돌파를 택한 승부사인 데다 휴가중 관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의도된 고립’을 택한 것도 이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설

비수도권 ‘대수도론’ 공동대응 한다는데...

광주와 전남도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제기한 ‘대수도론(大首都論)’에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도는 최근 광역행정협의회에서 ‘대수도론’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고 오는 8일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적극 논의키로 했다.

‘대수도론’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상하이와 도쿄처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어 주요 현안을 처리하려는 것이다. 3개 시·도지사들은 ‘대수도론’의 실현 방안으로 수도권 공동정책 개발 및 실천을 위해 상설협의체인 ‘수도권 협의회’를 설치키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 왔다.

‘대수도론’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공공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 조치가 완화되면 광주·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생존권을 위협 받게 된다.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주창해 왔지만,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하나 둘 완화해온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성장관리권역 내 대기업 기존 공장 100% 증설 허용, 수도권 공장총량제 설정단위 연장,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기한 연장,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등이 대표적이다.

‘대수도론’은 수도권의 공룡화와 비수도권의 공동화현상을 가속시킬 수밖에 없다. ‘대수도론’이 공장 신·증설과 대학 설립, 대규모 아파트 건축 등을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을 폐지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광주와 전남을 비롯 비수도권 광역단체들은 보다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방이 죽어가는데 팔짱만 끼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수해 피해 복한 지원 인색해선 안된다

정부가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미사일 발사 이후 쌀과 비료의 지원을 유보한 정부로선 결단을 내린 셈이다.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며 쌀을 포함한 보다 실질적 구호가 되길 기대한다.

북한 수해 지원은 정치권에서도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무리를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강경 입장을 고수해온 한나라당까지 의약품 및 생필품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단체와 각계 인사들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북한의 수해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월 평양에서 열기로 한 ‘아리랑 공연’을 취소한 것에서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평안남도의 한 군(郡)에서만 1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1만 정보 이상의 농경지가 유실됐다고 한다.

특히 이번 수해로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집중호우가 북한의 곡창지대로 쏟아지는 황해도와 평안도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을 경우 북한은 90년대 중반 이후 최악의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쌀을 지원 품목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수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쌀이고 북한도 남측의 정치적 목적이 없다면 못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정치적 배경보다는 인도주의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 응급한 모습을 보이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모두 “동포애적 입장에서 긴급원 체제와 인민을 구별해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전시작통권 3년내 한국 이양”

美 WP “한국 상황 바뀌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3년 안에 한국에 전시작통권 제권을 넘길 계획이며 향후 수년간 주한미군 수를 2만여명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 관리들이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한미안보정책협상(SPI) 회의에서 세워진 이 계획에 관련된 미 국방부의 한 관리의 “한국 내 상황이 바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3~14일 열린 이 회의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는 전시작통권제권을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사에서 미군 지원을 받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계획을 세우기로 동의했다. 이 계획은 2009년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지만 일부 변화는 5년이 걸릴 수도

있을 전망이라고 워싱턴타임스는 전했다.

이명을 요구한 이 관리의 “우리는 한반도의 새로운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리가 언급한 ‘새로운 현실’은 한국군의 능력 성장,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 한국 지도자들의 반미감정 등을 포함한다.

주한미군 규모 측면에서 미 국방부 관리들은 2008년까지 미 주력군의 수를 2만 5천명 이하로 감소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리의 미군과 한국군의 전투력이 현재에 비추어 군사기 도입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수를 예측 가능한 미래에 2만~2만5천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의 주한미군은 현재의 대규모 지상군에서 공군과 해군력이 강화된 군대로 옮겨갈 것이며 새로운 지휘 체계가 마련된 후에야 이런 중심이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무대왕함 함대공 미사일 발사 해군의 4천200급 구축함 문무대왕함이 3일 하와이 근해에서 자체 해상훈련중 450노트르 접근하는 4m 크기의 무인항공기 표적에 SM-2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쌀외에 콩·쇠고기도 FTA 개방 제외”

관세철폐 때 1조8천억 생산 감소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양허(개방) 초안에 쌀뿐 아니라 콩·쇠고기 등 주요 민감품목을 대부분 관세철폐 대상이 아닌 예외적 취급대상으로 분류, 오는 8월중순 미국에 제시할 계획이다.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 4일 농림부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한미FTA 농업계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국장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단 주요 민감품목은 대부분 예외적 취급범주에 넣을 것”이라며 “최초로 제시하는 양허안인 만큼 관세철폐 대상품목도 이행기간을 상당히 장기로 제시하는 등 보수적인 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관세 철폐에 따른 품목별 영향분석을 통해 쌀 가격의

■ 한·미 FTA체결에 따른 쌀·콩·쇠고기 생산액 감소 (단위: 억원)

	전체시장 규모	가격하락률 (%)	생산액감소
양파	2,587	4.7	184
고추	9,535	3.7	516
마늘	6,338	3.0	255
인삼	5,681	2.8	319
토마토	5,812	1.9	172
딸기	6,411	1.7	160
명품종	206	8.1	24
쇠고기	28,940	8.7	3,629
돼지고기	36,670	4.8	2,296
닭고기	9,476	9.9	1,212

미곡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 국산수요 대체 →국산가격 하락 → 국내생산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쇠고기의 경우 현행 40%인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국산 한육우값이 8.7% 떨어지고 생산액은 3천629억원 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아베 日 관방, 4월 ‘야스쿠니 참배’ 밝혀져 파문

아베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4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것으로 밝혀져 큰 파문이 예상된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그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못지않게 ‘야스쿠니’에 집

착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권에서도 ‘아시아외교의 실패’를 개선하기는커녕 한국 및 중국과의 좌중우돌을 거듭할 것이라는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장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엄격 적용”

범원·검찰 마찰 우려

최근 고법 부장판사 부인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영장전담 판사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한 엄격한 발부 기준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지난 2일 영장전담판사 간담회 결과를 보고 받고 “압수수색 영장은 국민의 신체·재산에 제약하는 마지막 수단인데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영장 기각을 놓고) 가끔 논란이 되는 것은 법원이 제대로 심사를 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며 영장 심사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 간의 마찰과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재경·수도권 내 12개 지방·지원 영장전담 판사들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검찰·경찰의 압수수색 및 부적합한 임의동행·긴급체포와 관련한 영장 업무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영장전담 판사들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당직 판사들도 발부해 왔던 압수수색영장을 영장전담판사들이 전담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도 시행 등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이라고 불구속제관 확대 원칙에 따라 구속적부심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차라리 ‘占 치는 책’을 보십시요...

“전남 관광지 많이 돌면 상 줘요”

‘전남 100경 투어 스탬프 랠리’ 6~13일, 151개팀 387명 참가

전남의 유명 관광지를 답사하며 확인 도장을 가장 많이 받아오면 상을 주는 ‘스탬프 랠리’(Stamp Rally) 방식의 행사가 전국 최초로 열린다.

전남도는 “6~13일 도내 관광지를 답사하는 ‘제1회 전라남도 100경(景) 투어 스탬프 랠리(Tour Stamp Rally)’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행사는 2명 이상으로 1개 팀을 만

들어 팀끼리 자유롭게 전남 100경 가운데 내륙 중심의 관광지 60경을 돌아보면서 스탬프 확인장소에서 도장을 가장 많이 받아오는 팀이 우승자로 결정된다. 행사에는 모두 151개 팀 387명(남자 211명, 여자 176명)이 참가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인수 전남도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투어 스탬프 랠리를 통해남도 관광 활성화와 함께 전남의 관광지를 전국 관광객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삼성 기부 8천억원 ‘장학재단’ 9월 출범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삼성그룹의 사회 환원 기금 8천억원으로 새로운 장학재단을 만들어 9월중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재단운영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삼성은 지난 5월18일 현 삼성 이견회 장학재단(4천500억원)에 3천억원을 추가 출연해 7천500억원을 장학기금으로 내놓았으며 500억원은 교육부에 소외계층 장학사업에 사용하도록 기부금으로 출연했다.

연합뉴스

‘아프간 행사’ 참가자 전원 5일까지 철수시키기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평화축제 참가자 아프가니스탄에 체류중인 한국인 전원을 5일까지 현지에서 철수시키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평화축제 참가 예정자 927명 중 620명은 지방으로 이동시켜 국경을 통해 출국토록 할 예정이며, 나머지 307명은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 카불공항을 통해 알마티, 델리, 두바이, 우루무치 등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외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안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5,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